

# “기본계획 재수립 재검토, 신항만 빨갛”

### 김의겸 새만금청장, 이 대통령 언급으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발표 미뤄 신항만 두고 김제·군산 갈등 촉발... 기본계획 재수립 수정 과정서 제외키로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을 멈추고, 최근 갈등이 심화된 새만금신항만과 관련된 내용을 빼기로 결정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15일 전북특별자치도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업무보고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MP 재수립 발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MP 재수립 발표 시안을 늦추겠다고 언급했다. 김 청장은 “취임 당시 새만금 기본

계획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는데 대통령의 언급을 담아 재수립을 재검토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보고 주체 대상인 새만금위원회도 구성이 안되어 있어 보고 대상도 없어 향후 기본계획에 대한 향후 일정을 잡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새만금사업의 희망 고문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그는 “현재 목표연도가 2050년으로 되어있는데 사업을 책임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책임감이 떨어지는 목표 연도라고 생각된다”면서 “연제라고 당장 언급할 수 없지만 목표 연도를 앞당겨 이후는 여백으로 남겨 놓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MP 재수립 수정 과정에서 새만금신항만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겠다고도 했다. 최근 새만금신항만을 두고 김제와 군산을 잇는 군산과 김제를 의식해서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신항을 제3 산업 거점으로 김제시 관할 지역과 함께 배치를 두고 군산시가 반발하고 있어서다. 반면 김제시는 이를 환영하는 입장을 내며 신항만을 놓고 지역 갈등이 재촉받는 모양새다.

김 청장은 “새만금청은 지자체 간 갈등에 개입 권한도 없고 개입도 안된다”면서 “오해의 여지가 없게 하기 위해 이번 기본계획에 신항만을 넣지 않겠다. 또 기본계획을 짜면서 권역부분 내용은 행정구역과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못을 박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에서 새만금 일대 개발과 관련해 “30년째 (개발)하고 있는데 일종의 희망고문”이라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이제는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15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전북자치도 산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제도 도입해야”

### 정종복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인 정종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은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역인재 채용은 도내 대학 출신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해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제도”라며 “현재 혁신도시법에 따라 국가 공공기관에만 적용되고,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북도의 출자·출연기관들은 별도의 지역인재 채용 기준을 두지 않고 있으며, 일부 기관만 주주식 기준으로 제한적 채용을 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전북 청년 고용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기업 유치만으로는 단기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공

공기관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재 도내 공공기관 공공 출신 채용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이는 제도적 보장이 아닌 일시적 결과”라며 실제로 일부 기관의 전북 출신 채용률이 큰 폭으로 변동한 사례를 들어 문제점을 짚었다. 정 의원은 경기도 의정부시와 충청도의 지역인재 채용 정책을 언급하며 “지방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이미 전국적인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만의 지역인재 기준을 마련하고, 채용 목표 설정과 경영평가 연계를 통해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김관영 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 도의회 의원 3명, 5분 발언 잇따라

### 전북형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확산 협의체 구성 제시 등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3명이 15일 열린 제42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이어갔다.



강동화 의원



김동구 의원



한정수 의원

강동화 의원(전주8)은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약자가 가장 먼저 배제되는 곳이 바로 키오스크 앞”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전면적인 키오스크 실태 점검 및 배리어프리 개선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북·산하기관·출연기관 전체 키오스크 전수 실태조사 즉시 시행, 조사 결과에 따른 연차별 교체·보완 의무화, 보조인력·원격 도움 시스템 기본 운영화, 민간 등을 포함한 전북형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확산 협의체 구성을 제시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군산 새만금 치유 학습 펜션 논란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무사안일한 행정과 소통 부재가 낳은 구조적 문제”라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절차·책임·소통을 경시한 행정 문화의 결과”라고 강조하

며, 교육청이 이번 논란을 계기로 신뢰 회복과 시스템 혁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시한 비전은 예산과 조직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총량 성과 홍보보다 도민이 확인할 수 있는 실행 체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도의 9대 아젠다와 74개 핵심 사업에 대해 “큰 구상과 비전은 제시되었지만, 각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예산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각 사업의 단계, 국정과제와의 연결성, 향후 전망 등 도민이 도정 운영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들며 “비전과 실행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하게 밝혔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 ‘5극3특’ 시대 대응 위해 재정특례 해법 모색

### 네 번째 릴레이 세미나... 재정특례 입법·발전전략 논의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특례 도입 필요성·법제화 방향 제시

전북자치도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인 ‘5극3특’에 대응해 실효성 있는 재정 특례 방향을 모색하고자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1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전북특별법’ 개정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재정특례 입법 및 발전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특례 도입 필요성 △지역특례 초광역경제 내 3특 특별광역권 신설 등 전북형 재정특례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전략 속에서 전북·강원·제주 등 3특 지역이 초광역특별계정으로 편입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다. 이를 통해 전북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균형성장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이 공감대를 모았다.

주제발표에서 부경대 이재원 교수는 전북이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중앙 정부 보조금 구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전북은 주요 투자사업에서 국고 보조금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기준보조율 특례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

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 역할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연구원 천지은 연구위원은 전북이 3특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재정 여건을 보유하고 있고 재정특례가 거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천 연구위원은 “진정한 5극3특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전북이 독자적 초광역권으로 규정돼 지특계정의 별도 편입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는 임상수 교수(조선대), 신유호 교수(단국대), 김홍주 책임연구원(세종연구원), 이현정 센터장(한국지방재연구원) 등이 참여해 전북형 재정특례의 제도적 실효성과 추진 전략을 다각도로 제시했다. /이만호 기자

강영석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정부의 5극3특 전략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방향”이라며 “전북이 실질적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준보조율 특례 도입과 3특의 초광역경제 편입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특례의 정책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세미나를 포함해 연말까지 릴레이 세미나를 이어가며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기반으로 ‘전북특별법’ 개정 논의를 보완하고, 2026년 정부 입법 반영을 목표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 새만금 중심 고령친화산업 거점도시 밑그림

### 도,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5개년 진흥계획’ 최종보고회 개최 시뮬뮌·웨어러블·스마트홈케어 등 Age-Tech 기반 산업 육성

전북특별자치도가 15일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5개년 진흥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고령친화산업 거점도시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역 수행기관인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권대규 교수)이 5개년 추진 성과와 최종 성과를 공유하고, 고령친화산업의 핵심 전략 분야와 복합단지 조성 로드맵을 제시했다.

전북도는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확대되는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시장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설정하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에 대규모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복합단지는 총사업비 약 6,000억 원을 투입해 약 30만 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내에는 고령친화산업 기술인 등 주요 연구·지원 인프라가 들어서며 복합용지를 비롯해 고령친

화기업 입주를 위한 산업용지, 주차장, 생태공원 등이 함께 조성된다.

도는 고령친화산업 활성화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된 점을 토대로, Age-Tech(에이지테크) 기반의 AI 돌봄로봇, 웨어러블·디지털 의료기기, 스마트홈케어 등 첨단기술 분야 기업을 우선 유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연구개발(R&D), 기업지원, 인증·실증, 인재 양성 기능을 아우르는 고령친화산업 혁신 거점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고령친화산업기술원 △고령친화산업인증원 △고령친화기업지원단 △고령친화산업인재개발원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 등 5대 핵심 기관 설립을 추진해 연구·산업·복지·교육이 연계된 지원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휴먼케어 로봇 등 신성장 분야를 중점 육성하고, 기업의 기술 사업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이번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5개년 진흥계획’ 용역 결과는 단계별 세부 과제와 실행 로드맵을 담은 단기 기본 계획 수립은 물론, 중앙부처 협의를 통한 국책사업 예산 확보와 국내외 기업 유치 지원을 위한 정책 근거도 활용될 예정이다. 도는 내년 보건복지부의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정부예산 3억 원 반영)’에 전북대 산학협력단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 허명숙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 도의회, “여성·가족 분야 전문성 부족하지만... 정책 연구기관 운영 및 언론 분야 경력 긍정 평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15일 전북여성가족재단 허명숙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후보자가 언론 분야에서의 오랜 활동과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장 재직 경험을 통해 여성·가족·성평등 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

이해도와 연구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했다. 다만, 가족센터 등 여성·가족 관련 현장 기관을 장기간 운영·총괄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감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또한 사회적 공헌과 기부 활동에 대

한 관심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징계나 범죄 이력은 없고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등 도덕성과 윤리성 측면에서는 특별한 결격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후보자에게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경험과 전문성 부족, 조직 운영 안정성에 대한 우려에 관하

여 향후 지속적인 소통과 정책 역량 강화를 통해 이를 보완·극복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임승식 인사청문위원장은 “전북여성가족재단은 2023년 출범 이후 도내 여성·가족 정책의 허브로서 양성평등 사회 실현과 여성·가족 복지 증진을 이끌어야 할 중요한 기관”이라며, “후보자는 재단의 공공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과 안정적 조직 운영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발전시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 전북도의회 ‘남북교류 대응방향’ 세미나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15일 남북 관계 변화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향후 교류협력 사업 추진의 정책적·학술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전북특별자치도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나인권 위원장(경제산업건설위원회)은 “세미나에서 수립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남북교류 사업 추진의 비전과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학술적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도, 가을장마 피해농가에 피해 복구비 지원

### 경영안정 위해 상환유예·이자 감면·저리 경영자금 등

전북특별자치도는 9~10월 가을장마로 피해를 입은 도내 3,684농가에 총 51억7,000만원의 복구비를 12월 중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가을철 잦은 호우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 면적은 총 4,313ha에 달하며, 주요 피해는 △논콩 3,770ha △무 240ha △배추 303ha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됐다.

전북자치도는 피해 직후 현장 조사를 실시해 침수·과습으로 인한 뿌리 썩음, 무름병 등 작물 고사 피해를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

인정을 요청했다. 이후 정부가 전북의 가을장마 피해를 공식적으로 농업재해로 인정함에 따라 복구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자치도는 피해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병행한다. 피해를 30% 이상 농가는 정책자금 상환을 1~2년 유예받을 수 있으며, 이자 감면 조치도 적용된다. 또한 추가 경영자금 1.8% 고정금리 또는 6개월 변동금리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지원이 제공된다. /이만호 기자